

“대장동 몸통은 野”... 이재명, 국감 정면돌파

“이익 환수는 내가 설계·이익 몰빵 국민의힘 설계”

각종 의혹에 명쾌한 해명...불확실성 사실상 해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정면돌파’하며 불확실성 해소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도 야당의 집중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이 후보에게 경기지사직 사퇴를 권유했지만 이 후보는 국정감사를 통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특유의 명쾌한 화법을 앞세워 해명했다.

〈관련기사 4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날 국감을 통해서 대장동 의혹의 본질과 책임이 ‘경기지사’가 아닌 ‘비리 세력’에게 있다며 화살을 돌렸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바로 ‘그분’을 찾아야 하는데, 그분은 돈을 나눠 가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면서 “개발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너무 많은데 그 뒤에는 대개 정치·관료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돈 사용자 찾아보니 50억원을 받은 사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곽상도) 아들, 고문료 받은 사람은 전 원내대표(원유철) 부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검(박영수) 등인데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엄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 야권이 집중 공세를 퍼붓자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제가 만약 화천대유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는 한푼도 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받아치기도 했다.

또한 대장동 의혹이 토건세력 배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토건세력 배제가 이재명 시

장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뒤에 철저히 숨었다고 한다”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도둑설계에 관여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답했다. 또 “3중 장막 뒤에 숨었는데, 첫 번째로는 은행 뒤에 숨었고 그 다음에 SK 뒤에, 그 안에서도 특정급전신탁이라고 하는 것 안에 숨었다”면서 “이익을 다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가졌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환수 조항 누락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설명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공모 자체가 소위 청약이고, 응한 것이 소위 법적으로 따지면 낙약인데 이 상태에서 집을 5억에 내놓고 사겠다는 한 사람한테 집값이 올랐으니 나눠 가지라고 하면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소송했을 것”이라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부족한 것은 맞다. 100% 환수했으면 좋았을텐데, 역량 부족으로 못 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시 주도의 개발을 하되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했던 것”이라며 “시장 선거를 할 때는 LH가 공공개발을 행정절차에 의해 시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민간개발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좌(左) 진상(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우(右) 동규”라는 말이 경기도에 돌아다니는” 질문을 받고는 “제가 정말 가까이하는 참모는 그 ‘동규’(유동규)로 표현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자신의 측근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선을 그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측근인 정보 전 성남시·경기도 정책실장이 대장동 사업 등에 연루 정황이 나오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질문엔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

한 그분이 문제 되면 국민의힘은 사퇴시킬 것이지만 먼저 답해주시면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단체장·지방의원 평가 착수

광주시당·전남도당

하위 20% 포함 땀 불이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3면〉

하위 20%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공천 심사 단계에서 20%, 경선 과정에서 20%씩 감산키로하는 등 4년 전 평가(각각 10% 감산)보다 페널티가 대폭 강

화돼 물갈이 폭이 커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지난 9월 중앙당이 마련한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라 최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나섰다.

시도당 평가위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평가하고 중앙당은 광역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별로 구분하고, 도덕성 등 평가기준에 따

라 총점 1000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 공천심사 단계에선 후보자가 얻은 점수의 20%를 감산하고, 경선에서는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한다. 4년 전 평가에서는 하위 20%에 대해 ‘공천 심사 시 10%, 경선 시 10% 감산’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페널티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를 상대로 평가를 해 하위 20%를 가려낸다.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이 가운데 3연임 단체장 2명과 대통령 후보자 1명을 제외하면 페널티는 1명이 받게 된다. 지역에선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중앙당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될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때는 인구 13만명 이상과 이하로 나눠 하위 20%를 정했으나 이번에는 시도별로 20%를 선정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페널티가 대폭 강화됐다”며 “정치신인이나 여성, 장애인 후보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면 현역 물갈이 폭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지법, 굵직한 지역현안 재판 잇따라 ▶6면

굿모닝 예향 - 화순의 멋과 맛 ▶18·19면



페퍼스의 힘, 광주팬 응원에서 나온다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서울특별시

당신의 여행이 2배 더 아름답도록

Beauty Seoul + Beautiful Cities

PLUS⁺CITIES
SEOUL + PARTNER CITIES

PLUS CITIES는 서울의 MICE인프라와 다른 도시의 독특한 관광 콘텐츠를 결합하여 MICE 관광객에게 더 큰 즐거움을 드리는 MICE 산업 지역 상생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서울 및 파트너 도시 연계 투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 MICE 관광객

지원조건 서울 및 파트너 도시 각 1박 이상 숙박

지원사항 외국인 1인당 현물 지원

PLUS CITIES 문의처 E-mail othercity@sto.or.kr
Web site miceseoul.com/pdflibrary